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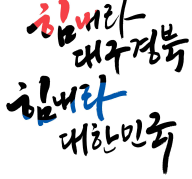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b>보 도 자 료</b>			 
	보도	2020.5.6.(수) 조간	배포	2020.5.4.(월)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02-2100-2650)	담 당 자	허 성 사무관 (02-2100-2655)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02-3145-7580)		문 상 석 팀 장 (02-3145-7600)	

## 제 목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21.9.1일부터,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2.9.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 발생

### 1. 국제 동향

□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금융회사의 인력부족과 위험관리 역량집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권고)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20.4.3일)

\*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등 20개 글로벌 금융협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  
< 기 존 >

거래 잔액	적용시기	적용시기
3조€ 이상	’16.9.1일	既 적용
3조€ 미만~2.25조€ 이상	’17.9.1일	既 적용
2.25조€ 미만~1.5조€ 이상	’18.9.1일	既 적용
1.5조€ 미만~0.75조€ 이상	’19.9.1일	既 적용
7,500억€ 미만~500억€ 이상	’20.9.1일*	’21.9.1일
500억€ 미만~80억€ 이상	’21.9.1일*	’22.9.1일

\*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정 → 법률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20.3.6일)

○ 싱가포르(MAS), 캐나다(OSFI), 스위스(FINMA), 일본(JFSA), 유럽(EBA) 등도 BCBS·IOSCO의 결정과 같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였습니다.

## 2. 국내 이행시기 : 1년 연기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와 관련한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 국내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 해외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준비 관련 어려움

- ❶ (인력 부족) 재택근무, 분리근무(대체사업장) 등의 시행으로 기존 업무유지 외에 신규업무 추진이 곤란
- ❷ (위기대처 집중) 시장변동성 확대로 자금조달 등 유동성 확보, 우발채무 및 포지션 관리 등 단기적 상황대처에 주력
- ❸ (해외협업 곤란) 서버 등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배송과 기술관련 인력의 국내입국이 지연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21.9.1일부터,

\* '19년 기준 39개 : 은행23개(외국계14개), 증권8개, 보험8개

-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2.9.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합니다.

\* '19년 기준 19개 : 은행5개(외국계4개), 증권7개, 보험6개, 자산운용1개

### < 금융 용어 설명 >

- 비청산장외파생상품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mailto: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합의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 ① (중앙청산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쳐 특정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의무청산을 시행('14.6월)
  - ②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바젤Ⅲ자본비율 산출시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14.6월)
  - ③ (증거금)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 부과제도를 시행('17.3월)
  - ④ (거래정보저장소\*)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근거를 마련('19.1월)
- \* 장외파생상품 관련 계약 정보를 수집, 보관,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
- ⑤ (전자거래플랫폼)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장현황과 국제동향을 모니터링

\* G20 합의내용 : ‘적절한 경우(when appropriate)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도입현황 >

제도개선 내용	도입방법	도입시기
중앙청산소(CCP) 도입	자본시장법	'14.6월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 적용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4.6월
증거금(Margin Requirement) 부과	가이드라인	'17.3월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금투업규정	'19.1월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도입방안 검토('17.10월 연구용역 완료)	미정